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
일부개정법률안  
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3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2.

발 의 자 : 김기현 · 홍문표 · 박성중  
이주환 · 김성원 · 김태호  
권명호 · 金炳旭 · 김선교  
홍준표 · 김영식 · 임이자  
이채익 · 서범수 · 조수진  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신산업 혁신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과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의 유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감면 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, 첨단제품 투자기업,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경제자유

구역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85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”를 “생활여건 개선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, 나아가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”로 한다.

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4(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
2.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
3. 해당 지역 내 중점특화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
4.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
5. 중점특화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외국인투자기업(이하 “입주외국인투자기업”이라 한다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(이하 “입주국내복귀기업”이라 한다)”을 “다음 각 호의 기업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”을 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”으로, “설치 및 운영에”를 “설치·운영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”로 한다.

1.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(이하 “입주외국인투자기업”이라 한다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(이하 “입주국내복귀기업”이라 한다)
3.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(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) 투자기업
4.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고자 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<u>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<u>생활여건 개선 및 외국</u> <u>인투자를 촉진하고, 나아가 산</u> <u>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함으로</u> <u>써</u>----- -----.</p> <p>제3조의4(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<u>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<u>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</u></p>

	<u>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</u>
	<u>3. 해당 지역 내 중점특화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</u>
	<u>4.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</u>
	<u>5. 중점특화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</u>
	<u>6.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
	<u>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제16조(세제 및 자금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<u>외국인투자기업(이하 “입주외국인투자기업”이라 한다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(이하 “입주국내복귀기업”이라 한다)</u> 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	제16조(세제 및 자금지원) ① 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기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,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, 의료시설·교육시설·연구시설·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

1.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(이하 “입주 외국인투자기업”이라 한다)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(이하 “입주국내복귀기업”이라 한다)

3.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(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) 투자기업

4.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고자 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

② -----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

<u>운영에</u>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	<u>설치·운영 및 혁신생태계 조성</u> <u>을 위해</u>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